

원,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확대 관련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신상정보가 포함된 영상물, 게시글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과 강요 시 더 큰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법」, 「청소년 정보보호법」 개정,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정보의 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9월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위원회는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과 디지털 공간의 범죄 확산에 대해 보다 깊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모색해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 09. 11.

더불어
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 · 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